

지금 아니면 어렵다

기후환경이야기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전 의장



“지금 아니면 어렵다.”

유엔 산하 IPCC(기후변화범정부기구)가 지난 주 발표한 ‘6차 기후변화평가 종합보고서’의 핵심 메시지다. 기후위기 극복에 당장 나서지 않으면 너무 늦고, 기후재앙이 불가피하며, 되돌릴 수 없다는 뜻이다. 기후위기가 그만큼 절박한 지경에 와있음을 말하는 일종의 인류사회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고이다.

6차 보고서는 9년 만에 나왔다. 세계 각국의 수천 명이 과학자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과학적 사실에 기초해서 작성했다. 종합보고서는 실로 방대하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 결정자를 위한 요약보고서’는 40쪽 내외로 축약, 총회를 통해 195개국 국가 대표들이 치열한 토론과 검토과정을 거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보고서에 ‘정책 결정자를 위한’이란 수식어를 달았는데 각국의 지도자, 정책결정자들이 반드시 읽으라는 취지에서다.

보고서에 의하면, 지구 평균온도는 산업화 이전(1850-1900) 대비 1.1℃ 상승했다. 인간이 만든 기후변화 때문이다. 산업화 이후 현재까지 세계는 화석 연료를 이용하며 경제사회발전을 거듭해 왔다. CO₂ 등 온실가스 배출이 불가피했고, 결과적으로 지구온난화, 기후위기를 초래했다. 1.1℃ 상승만으로도 인류

사회는 극심한 기후위기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 지난 10년, 해마다 발생한 가뭄 홍수 태풍 폭염 등 각종 기후재난으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막대했다. 특별히 가난한 기후 취약지역에서의 피해가 다른 지역보다 15배로 높았다.

과학자들은 ‘현재의 구조가 계속된다면’, 기온상승 또한 불가피하며 10년 전후에 1.5℃를 통과할 가능성도 있으며, 금세기말 3℃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 이것은 인류의 미래가 위태로운 재앙으로 간다는 것을 뜻한다.

지난 2015년 국제사회는 파리기후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은 지구평균온도의 상승을 세기말까지 1.5℃를 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협정의 핵심이다. 1.5℃를 사수하려면 2030년 온실가스 배출을 50% 줄이고, 2050년 순제로 배출(탄소중립)로 가야 한다. 실로 야심찬 목표이다. 이후 세계 각국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약속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유엔에 제출된 각국의 기후행동 약속이 파리협정의 목표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2022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이 1% 상승했다. 현재의 노력만으로는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과학자들은 지구평균온도를 1.5℃ 이내 묶어두는데 필요한 탄소예산은 5,000억 톤으로 산정했다. 그 이상 배출하면 기온상승이 불가피하다. 2019년, 연간 590억 톤을 배출했으나, 이대로 간다면 8년이면 소진할 수밖에 없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기후 시한폭탄이 작동하고 있다’고 했다. 즉각적인 조치,

즉 금년 혹은 내년 배출 정점을 찍고, 빠르게 하강곡선을 그려서, 2030년 50% 감축 목표를 달성할 것을 역설했다.

과학자들은 ‘지금부터 향후 10년’을 중시하고 있다. 향후 10년의 선택이 수백 년 혹은 수천 년을 간다고 강조하고 있다. 파리협정의 목표, 1.5℃를 통과하고 2℃를 넘어가게 되면 인간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과학자들은 이를 급변점, Tipping Point라고 하며, 이를 넘어서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지금 나서서 이미 약속한 1.5℃ 사수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매진하고자 한 것이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그것은 가능하고 지금까지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Knowhow), 그리고 투자할 재정적 역량도 충분하다. 그들은 화석에너지의 신규 개발이나 투자를 멈춰야 하며, 태양 및 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 현 수준에서 3-6배 투자해야 한다. 향후 10년, 인류의 미래 희망을 만들어 가려면, 정책결정자들의 각성과 결단이 필요하다.

이번 IPCC 6차 보고서는 세계 모든 나라, 특히 한국처럼 잘 사는 나라에 던진 경고이다. ‘2050 탄소중립’의 약속이 ‘말로만 존재하고’, 정책이나 실행계획, 적극적 투자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탈탄소, 탄소중립을 위한 모든 부분과 영역에서의 혁신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는 기후위기의 교차로에서 ‘지옥의 고속도로’가 아닌, ‘함께 잘 사는 지속가능한 미래’로 갈 수 있다.

社說

국토부, 립서비스 아닌 실행 계획 밝혀야

원 장관 “미래차 산단 조기 조성”

최근 국가첨단산업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조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주무 부처 장관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광주를 찾아 “국토부 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들도 참여하는 범정부추진단을 발족, 미래차 국가산단 조성사업을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광주 북구 임동 옛 전남방직·일신방직 내 복합쇼핑몰 입점 예정 부지를 찾은 원 장관은 강기정 광주시장과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조기 조성 및 도시발전 인프라 지원 협력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강 시장은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조기 착공, 교통혼잡도로 개선, 달빛고속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등의 국가지원을 건의했다. 광주시는 국토부에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이 신속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선정, 예비타당성 조사, 그린벨트 해제 등 산단 조성에 필요한 절차 이행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원 장관은 “원팀을 가동해 최대한 국가 지원

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구체적으로 4월 중 사업시행자 선정을 마치는 등 실질적으로 산단 조성에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5일 국토교통부 신규 국가첨단산단 최종 후보지에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이 선정된데 따른 국토부의 국가산단 추진계획과 지역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하여 이같은 원 장관의 발언이 국면 전환용 립서비스가 아니길 바란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방정부의 요청에 이처럼 시원시원하게 화답한 것이 처음 이어서 그렇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12일전 신규 국가첨단산단 발표때 광주시와 전남도를 비롯한 비수도권에서 터져 나온 “수도권 들러리만 선 것 아니냐”는 불멘소리를 의식한 행보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경기도 용인에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집중 육성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반도체 정책 영향으로 인해 많은 비수도권지역에서 지역 균형 발전이 뒷걸음치게 된 셈인만큼 정부는 비수도권지역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후속 실행 계획을 속도감있게, 진정성있게 내놓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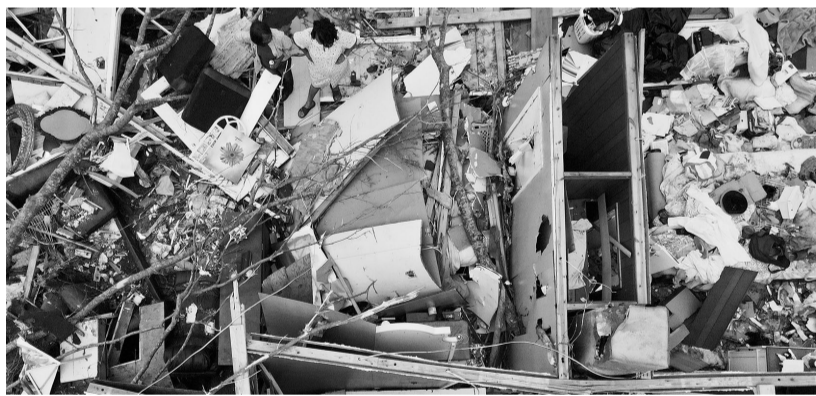
양곡법, 재정부담보다 식량안보 중시해야

野 단독처리, 정부 거부권 시사

야권의 단독처리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을 놓고 정부와 정치권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숙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당사자인 지역 농민단체도 27일 법안에 대해 환영하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먹거리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식량정책마저 여·야가 대립하고 당사자마저 반대하는 상황이 유감스럽다. 양곡관리법의 핵심은 쌀 초과생산량이 3~5%를 넘어 쌀값 하락이 우려되는 경우나 쌀값이 평년보다 5~8% 이상 하락한 경우 정부가 수확기에 쌀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식량자급률을 일정 수준 유지하고, 식량안보를 확립하지는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의당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득실만 따진 포퓰리즘 입법’이라며 반대를 분명히 했다.

되는 현실에서 양곡관리법이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완벽한 해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농민의 생활 안정과 식량안보를 위해 일정한 조건에서 매입을 의무화 하자는 민주당 안이나 의무 매입 시 소비가 줄어드는 쌀이 과잉 생산되고 정부의 수매와 보관 부담이 커진다고 맞서는 국민의힘 주장도 어느 한 쪽만이 옳다고 할 수 없다. 농민회도 입법을 주도한 민주당을 향해 ‘있으나 마나 한 법’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반복되는 쌀값 폭락 속에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식량안보를 지키고 망가진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답은 명확하다. 국가의 전략적 자산인 쌀을 지키는 것 또한 국가의 책무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투자다. 정치권은 무책임한 경쟁에서 벗어나 전략 자산인 쌀을 지키기 위한 농가 지원과 농업 구조 개선에 대해 진지한 협의에 나서야 한다. 대통령의 결단도 중요하다. 거부권 행사가 최선이 아니라 입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법의 취지를 살리는 보완책을 찾아야 한다. 재정 낭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식량안보를 모두가 명심해야 한다.

쌀 소비가 줄고 밥상용 쌀까지 수입



사진으로 보는 세상

미 미시시피주에 강력한 토네이도가 지나간 후 26일(현지시간) 롤링 포크 주민들이 파괴된 집 잔해를 허망하게 바라보고 있다. 미시시피주를 강타한 토네이도로 지금까지 최소 26명이 숨졌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롤링포크=AP/뉴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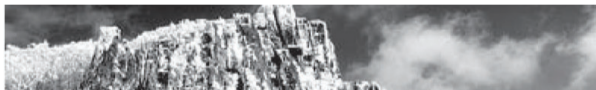
서석대

민족분단의 질곡에 날것으로 부딪치며 한 편의 영화같은 삶을 살다 간 이가 있다. 지난 2013년 세상을 떠난 음악가 정추(1923~2013)가 그다.

정추는 자신의 태를 물었던 광주에 육신도 잠들길 원했지만, 고국에서 내쳐져 떠나면 이국땅 카자흐스탄에 묻힐 수밖에 없었다. 굴곡진 현대사만큼이나 그의 삶도 지난했다. 아흔의 생애 동안 국적이 다섯번이나 바뀐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월북해 평양음대 교수로 재직했다. 하지만 김일성 독재와 개인 우상화를 반대하다 결국 구 소련으로 망명했다.

유복한 집안 환경과 쟁쟁한 음악가들을 가족으로 둔 만큼 음악에 대한 그의 재능은 남달랐다. 그의 외삼촌은 당시 베를린음대 출신의 성악가였고, 형 준재는 1946년 좌우 합작영화 ‘민족전선’을 연출한 감독이었다. 동생 근은 어린 시절 자주 흥얼거렸던 동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이라는 곡을 썼다.

정추 선생의 개인적 업적은 상상 이상이다. 1961년 유리가가린의 우주비행 첫 성공을 축하하는 국가적 기념식에 선 그의 곡 ‘뗏목의 노래’가 연주됐다. 차이코프스키 음악원에서 졸업 작품으로 작곡한 교향곡 ‘조국’은 심사위원들로부터 유례없는 만점을 받았다. 구 소련 음악가 사전에는



‘차이코프스키 음악 계보의 4대 작곡가’로 기록돼 있다. 카자흐스탄 교과서에 실린 작품만 60여곡에 달한다. 칭송받는 음악가였지만 신분은 늘 불안정했다. 소련 유학 중 북한 학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김일성 독재를 비판한 것이 화근이 됐다. 북한 당국은 소련 정부에 정추의 송환을 요구했으나, 소련은 대신 카자흐스탄 알마티로 유배를 보냈다. 그리고 17년 후야아 그에게 공민증을 발급했다. 23년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13년은 북한 인민으로, 17년은 무국적자, 16년은 옛 소련 공민으로 살아온 그이지만 그가 작곡한 음악 300여곡엔 민족혼이 오롯이 서려 있다. 특히 그의 마지막 작품

이었던 ‘내조국’은 공상각지구 5음계만으로 조국에 대한 그리움을 절절히 표현했다. 대표작 ‘내조국’은 그의 꿈이기도 했다. 2013년 그가 눈을 감기 전까지 자신의 노래가 통일 조국의 애국가로 불리길 바랐던 것이다.

평생을 경계인으로 살아야 했던 정추선생이 태어난 지 올해로 100년이 됐지만, 그의 혼이 서린 ‘내조국’은 반세기 가 넘도록 고국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살아생전 고국에 정착하지 못했던 것처럼...

정추 선생 탄생 100주년을 맞아 생전에 그가 임버릇처럼 했던 “내 마음은 언제나 조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라는 말이 깊은 울림을 준다. 박상지 정치부 차장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기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 보도 실천 지역 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정치부 (062)510-0461 사회부 (062)510-0340 경제부 (062)510-0380	문화체육부 (062)510-0394 전남취재부 (062)510-0336 뉴스콘텐츠부 (062)510-032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원 1부 500원	1988년 4월 25일 등록번호 광주 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FAX (062)510-0436	광고문의 (062)512-0100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